데스크시각

월드컵 축구와 즐기는 삶

채희종
여론매체부장

2018러시아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이미 탈락한 한국 축구를 놓고 아직도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 팀이 첫 경기였던 스웨덴전에서 제대로 슈팅 한번 해 보지 못하는 무기력한 게임으로 16강이 좌절됐다는 비난이 지금도 온라인에 줄을 잇는다. 반면 '꼴등이 1등을 이겼다'며, 독일을 상대로 거둔 2-0 승리를 기적으로 치켜세우는 국민도 많다.

올림픽 경기장의 세 부류

한국의 월드컵 경기를 놓고 비난과 칭찬으로 갈린 데다 양측 주장이 모두 일리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더불어 두 게임을 지는 동안 국가대표 팀을 맹비난하다가 독일전에서 승리하자 영웅으로 치켜세운다며, 이런 국민의 태도를 '냄비 근성'으로 몰아붙이는 일부 언론이나 축구 팬들도 있어 논란은 여전하다. 이는 일반 스포츠와 달리 월드컵이나 올림픽 같은 메가 스포츠의 경우 국가 대항전 성격이 짙어 국민들도 응원으로 경기에 가세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풍경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온 국민이 열광하는 스포츠 경기가 열릴 때면 생각나는 얘기가 있다. 2500년 전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피타고라스가 인간의 삶(인생)을 '올림픽 경기장에 가는 사람'으로 비유했다는 바로 그 얘기다. 피타고라스의 비유는 흔히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으로 철학 입문서나 교양서에 나오기도 한다.

피타고라스는 올림픽 경기장에 가는 사람을 세 부류로 나눴다. 하나는 경기장에 온 사람들에게 물건을 팔려는 장사꾼이고, 또 하나는 경기에서 이기려고 뛰는 운동선수이며, 나머지 하나는 그냥 게임을 보러 온 관객이다. 장사꾼은 오로지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객석 사이를 부산히 움직인다. 누가 잘하는지, 어느 팀이 앞서는지는 관심 밖이다. 오랜 기간 기량을 갈고 닦아 출전한 운동선수는 승리를 위해 온몸을 던진다. 그에게 경기는 인생을 건 전쟁이나 마찬가지다. 하지만 관객은 그저 경기 보는 재미에 빠져 다른 곳에 신경 쓸 겨를이 없다.

피타고라스가 말한 경기장의 풍경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다르지 않아 보인다. 그렇다면 과연 이들 중 경기를 제대로 보고, 즐기는 사람은 누구일까. 이익을 남기려는 장사꾼과 이름을 떨치려는 운동선수는 자신들의 목표에 집착한 나머지 경기를 관조하기가 쉽지 않다. 구경하러 간 사람만이 이해관계의 얽매임 없이 온전히 경기에 몰입할 수 있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피타고라스의 이런 비유는 '정말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행복할까'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진다. 즉 관조하고 즐기는 삶이야말로 바람직한 인생의 자세라는 철학적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다. 피타고라스의 가르침이 철학적 진리라면 그 가르침이 현대에도 유효한 것일까? 하루라도 돈 없이는 못 살고, 권력을 얻거나 높은 지위에 올라가려고 안간힘을 쓰는 현대인들에게 돈과 권력을 멀리하라니, 별로 가진 것도 없는데 집착하지 말라니. 철학적 가르침이란 그저 책에서나 실현 가능한 것일지 모른다. 하지만 피타고라스의 비유를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그렇기에 역으로 그만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재벌이나 프랜차이즈사의 하청 업체 또는 가맹점에 대한 '갑질'이 어디 돈이 없어서 일어난 일인가. 오히려 돈이 많은 탓에 더 많은 돈을 쉽게 벌기 위해 벌인 일 아닌가.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들의 국정 농단 역시 권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권력이 강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돈과 권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돈과 권력이 남아서 남을 해치고 결국에는 나까지 망하게 하는 것이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즐겨야 하고, 즐기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와 집착에서 약간이라도 벗어나야 한다.

100m 달리기 한국 대표가 우샤인 볼트에게 졌다거나 예선에 탈락했다는 이유로 흥분할 국민은 한 명도 없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심폐 기능과 근육량·지구력 등에서 서양인에 비해 떨어지는 신체 기능을 정신력만으로 극복하기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이다. 여기에 팀워크까지 갖춰야 하는 축구라면 더 말할 나위 없다. 매사에 좀 더 거리를 두고 즐기는 자세를 가져 보자. 생각보다 행복해지는 게 쉬울 수 있다.

/ chae@kwangju.co.kr

은펜칼럼

근로자와 저소득층의 삶의 질을 높여야

임명재
약사

문재인 대통령 정부는 국정과제 보고를 통해 국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분야에서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그리고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5대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우리나라도 이젠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에 대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그 수준을 높이고 관리할 시기가 도래하였다고 생각한다.

광복 이후 그리고 한국전쟁 이후에 우리는 오로지 성장과 금전적 이익에만 치중하며 살아왔다. 참으로 열심히 정말 치열하게 살아왔다. 눈부시게 발전하였다고 칭송하지만 그 이면에는 노동자들의 참혹한 희생이 존재했다. 지독한 저임금에 살인적인 노동시간으로 기업들은 이익을 키워갔다. 그 동안의 사회 분위기는 기업의 생존이 곧 국가의 생존과 직결되었고 수출이 최우선의 목표였다. 아무것도 없던 시절, 오로지 우리 국민 개개인의 노동력과 성실함과 그리고 불굴의 투지로 일궈낸 결과이다. 기술력보다 저임금의 노동력이 가장 큰 경쟁력이었다.

그러나 우리가 OECD에 가입한 선진국가라고 하면서, 눈에 띄게 우리의 경제 형편도 나아졌음을 체감하고 있음에도 사회적 약자인 국민들의 삶의 질은 호전되지 않고 과거의 행태를 답습했던 것은 큰 문제였다. 그 동안의 정부는 오로지 성장에 방점을 두는 정책으로 일관되었다. 그 결과는 역설적이게도 대한민국의 경쟁력의 약화를 불러왔다.

첫째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이다. 당장 자신의 삶의 무게가 버거우니 결혼을 하거나 아이를 갖는 것 자체가 엄두가 안 나는 것이다. 아이를 낳으면 금전적으로 보상해 주는 것으로 해소될 수 있을 정도의 문제가 아니다.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은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여유가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사람이 아이를 기르는 것은 동물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양육이 가능했을 때 비로소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가질 것이다. 저출산 현상은 앞으로 젊은이들의 배출에 차질을 일으켜 경제 성장과 국방력 등 온갖 사회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둘째는 소상공인들과 저소득층 그리고 노인들이 중심이 되는 경제 순환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재래 시장이나 노점상 그리고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동네 상권은 그러한 상업 시설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따로 형성이 되어 있어서 그 고객들의 삶의 질이나 소득 수준이 나아져야 이들 상권도 활성화가 될 것이다. 장시간의 노동 시간과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저임금의 노동력으로 사업의 이익을 가져가려는 구조로는 이러한 동네 골목 상권을 결코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 그리고 후진국을 비교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OECD에 가입한 국가라고 자랑하듯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의 실질적인 삶이 과연 OECD의 다른 회원국들 만큼 나아졌는지는 의문이다. 후진국들은 국가의 이익이 극히 제한적인 사람들에게 집중되어 있고 대부분 국민의 삶은 각박하다. 개발 도상국은 각 계층간 순환이 이뤄지면서 대립이 발생한다. 갈등의 요소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들이다. 그리고 선진국은 개별 국민들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한다. 국가가 이제는 국민 개개인의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나라의 실질적인 경쟁력이 커질 것이라 믿는다.

일부 회의론자들은 노동 시간 단축과 최저 임금의 상승으로 기업의 경쟁력이 저하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그렇다면 이들은 유럽 국가들의 높은 세금과 임금 그리고 짧은 근로시간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의 삶을 유지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많은 저임금과 장시간의 노동시간에 불구하고 후진국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국가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저소득층과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노동 시간의 단축과 최저 임금의 향상에 대한 문제는 공정한 거래 질서를 유지함으로써 해소될 수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기술 개발과 효율을 높이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재벌들의 내부 거래와 부당한 하도급을 방지해야 한다. 이러한 행위는 기술과 서비스 개발을 가로막는 심각한 폐해이다.

그리고 최저 임금이 상승하는 것처럼 납품 단가의 정당한 보장이 이루어지도록 국가가 적극 관여해야 한다. 또한 업무 시간에만 일에 집중하고 그 외에는 자신과 가정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많은 노동 시간보다는 효율을 중시하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 그래야만 출산율도 높아지고 젊은이들의 활기가 높아질 것이다. 번데기가 탈피하여 나비로 변화하듯이, 대한민국도 이젠 변화와 개혁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다.

기 고

우리 사회의 재난에 대비하는 정책성 보험

이상림
목포대 교수·한국보험학회장

최근 태풍 쁘라삐룬(Prapiroon)이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주지 않은 채 물러나자마자 또 다른 태풍 마리아(Maria)가 북상하고 있다는 소식에 마음이 편치 않다. 우리나라와 가까운 북서태평양 해역에서는 보통 연평균 9~12개의 태풍이 만들어지므로 올해의 태풍에 대한 걱정은 이제 시작일지도 모른다. 지난겨울엔 제천 스포츠센터와 밀양 세종병원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수십 명이 사망하는 사건도 전 국민을 충격에 빠지게 했다. 우리가 겪는 자연 재난을 비롯한 대형 재난은 점점 그 빈도가 잦아져 인명 피해는 물론 재산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자연 재해의 경우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상 기후 현상으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도 점차 극심해지고 자주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16년 대설, 호우, 태풍, 그리고 이제는 지진까지 원인이 된 우리나라의 자연 재난으로 인한 재산 피해는 2880억 원 규모에 이르고 있다. 자연 재난으로 인한 피해는 그 절대 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에 평소 꾸준히 예방에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인재(人災)가 겹쳐 피해가 더욱 확대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복구할 수 있도록 관련 보험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국가는 자연 재난으로 인한 피해 복구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성 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풍수해 보험, 가축 재해 보험, 농작물 재해 보험, 그리고 양식수산물 재해 보험은 주택·온실과 가축·농작물·양식수산물에 발생하는 자연 재난으로 인한 손실을 대상으로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의 55~92%까지 지원하고 있다.

대표적인 정책성 보험이라고 할 수 있는 풍수해 보험은 풍수해 보험법에 근거해 지난 2006년부터 주택 및 온실을 대상으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고 있으며, 정부와 풍수해 보험 사업 운영 약정을 체결한 5개 민영 보험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다. 그리고 풍수해 보험에서는 지진을 보상하는 손해의 원인으로 포함하고 있어 2016년의 경주 지진 및 2017년의 포항 지진을 겪은 이래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다.

'농어업 재해보험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가축 재해 보험, 농작물 재해 보험, 양식수산물 재해 보험은 각각 16종의 가축, 57종의 농산물, 그리고 18종의 양식수산물과 그 양식 시설을 가입 대상으로 국가가 보험료의 50~59%까지 지원하여 운영되고 있다.

한편 최근에는 지난 1973년부터 의무적으로 이용해오던 화재 보험(특약) 외에 다중 이용 업소 화재 배상 책임 보험과 재난 보험을 새로 도입해 민영 보험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다. 그리고 '다중이용 업소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기초한 다중 이용 업소 배상 책임 보험은 음식점, 문화 스포츠 등 23개 업종에서 발생하는 화재 및 폭발로 인한 제3자 배상 책임 손해를,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에 의한 재난 보험은 앞의 두 의무 보험에서 제외된 19개 시설 점유자나 관리자의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제3자 배상 책임 손해를 보상한다.

재난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고 바람직하다. 그러나 예방 활동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경우의 손해 역시 관리가 필요하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국가의 정책성 보험은 국민이 직면하는 자연 재해와 제3자 배상 책임 손해를 사후적으로 복구할 수 있도록 도입 및 활용하고 있는 것들이다.

그러나 정책성 보험의 활용과 관련해서는 아직 개선되어야 할 여지가 있다. 즉, 무엇보다 먼저 정책성 보험 중 의무 보험을 제외한 풍수해 보험, 가축 재해 보험, 농작물 재해 보험, 양식수산물 재해 보험 등은 활용도가 매우 낮다. 주택·온실을 가입 대상으로 하는 풍수해 보험의 경우 2017년 가입률이 주택은 24.9%, 온실은 7.2%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풍수해 보험을 비롯해 각종 정책성 보험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자연 재난이나 대형 재난의 규모가 커지고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 모두가 이에 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책성 보험을 활성화하기 위한 더 큰 노력이 요청된다.

社 說

광주시의회 '밥그릇 싸움' 구태 답습해서야

광주시의회의 파행이 개원 첫날부터 이틀째 이어졌다. 8대 의회 첫 임시회 1차 본회의가 열린 지난 9일 오전 10시, 당초 전반기 의장과 부의장 2명 등 의장단을 선출하고, 상임위원회 위원을 선임할 예정이었으나 정례회의는 불과 2분도 되지 않아 정회했다.

최다선 및 최연장자 자격으로 의장 직무대행을 맡은 반재신(북구1) 의원은 "민주당 의원총회 소집 요구가 있어 정회를 선언한다"며 의사봉을 두드린 뒤 본회의장을 빠져 나갔다. 사전 논의가 충분하지 않았던 동료 의원들은 크게 동요했고 이후 본회의는 다음날까지도 다시 열리지 못했다.

이날 파행은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이미 예고됐었다. 전반기 의장 선거에는 애초 반 의원을 비롯해 김동찬(북구5), 김용집(남구1) 의원 등 시의회 재선 의원 3인이 모두 도전했다. 하지만 이날 오전 반 의원과 김용집 의원이 나란히 사퇴했다. 이어 세 후보들 사이에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을 선거구 별로 골고루 분배하자는 의견이 오갔고, 이에 대한 입장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파행을 빚은 것이다. 의장단 구성을 놓고도 민주당 시당위원장과 3선 국회의원 출신 간의 대리전 양상이 노골적으로 드러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결국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밥그릇 싸움'의 구태가 재연되고 있다는 것이 지방정가의 분석이다. 이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소속 후보들이 싹쓸이 당선되면서 어느 정도 예견됐던 터이기도 하다.

이날 파행에 대해 유일한 야당인 장연주 의원은 "둘로 갈라선 민주당 의원들의 힘겨루기로 파행을 빚었다"며 "야당과 시민을 존중하지 않고 잿밥에만 관심을 두는 시의회가 촛불 민심을 제대로 실천할 리 만무하다"고 꼬집기도 했다. 시의회, 언제까지 의회 권력 나눠 먹기식의 비민주적 운영 행태를 답습할 것인가.

잇단 '정신질환자 범죄' 관리 체계 정비를

최근 정신질환자 관련 사건이 잇따르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살인 전력이 있는 조현병 환자가 병원을 탈출해 도심을 활보하고 조울증 환자가 고속버스에서 흉기로 승객을 공격하는 사이 시민들이 무방비로 노출됐기 때문이다.

광주 광산경찰과 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조현병을 앓고 있는 김 모(48) 씨가 지난 8일 광주 광산구 신창동의 한 병원 폐쇄 병동에서 탈출했다. 김 씨는 택시를 타고 서구로 갔다가 시내버스로 동구의 병무청 인근으로 이동한 뒤 금남로의 한 교회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김 씨는 다음날 언론 보도를 접한 시민의 신고로 북구에서 붙잡혔다.

검거될 때까지 13시간 동안이나 광주 도심 곳곳을 돌아다닌 것이다. 김 씨는 지난 2011년 장성의 한 병원에서 환자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해 징역 3년에 치료 감호 15년을 선고받았다. 치료 감호가 가종료된 후 이 병원에서 지내오다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한 것이다.

앞서 지난 1일에는 조울증을 앓고 있는 20대 여성이 경남 통영발 광주행 고속버스에서 앞좌석에 앉아 있던 40대 남성을 흉기로 수차례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여성과 남성은 모두 광주에 거주하고 있었지만, 일면식도 없었던 사이였다.

광주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는 6000명에 육박한다고 한다. 이들과 관련된 사건·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관리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광주보호관찰소의 보호 관찰 대상자는 3850명에 이르지만 직원은 고작 63명에 불과하다. 폐쇄 병동 내 직원 상주는 꿈도 꾸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현병 환자는 적절한 치료로 사회 복귀가 가능한 만큼 정신질환자들을 무작정 잠재적인 범죄자로 몰아가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하지만 시민들의 불안감이 큰 만큼 정기 방문 점검 등 관리 체계를 서둘러 정비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지방 의원

지난 6·13 지방 선거에서 구청장에 출마했던 대다수 지방 의원들은 여론 조사에 사용할 자신의 직함 문제로 머리를 싸맸다. 지방 의원 경력을 사용하면 지지율이 고작 한 자릿수에 그쳤기 때문이다.

여론조사에서 지역 주민의 대표로 뽑혔던 지방 의원들에 대한 지지율이 높게 나오지 않는 이유는 간단하다. 1991년 지방의회 선거가 다시 시작된 이래 27년이 되었지만, 이들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은 긍정적 이미지 보다는 부정적 이미지가 더 크기 때문이다.

개원 초반부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자리 싸움으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광주시의회가 단적인 예가 아닐까 싶다. 지난 9일 개원했지만, 의장단 선출도 하지 못한 채 이틀째 파행을 겪었다. 광주시의회 23명의 의원 중 22명이 민주당 소속인데도 두 파로 나뉘어 자리 싸움만 벌인 것이다.

특히 초선의원이 대부분인데도, 자리 싸움에 몰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번 지방의회도 실망감이 앞선다. 전남 시·군의 장협의회는 재직 기념을 위해 100만 원 상당의 황금 열쇠를 제작했다가 뒤늦게 환불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지방의원 의식 수준과 자질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지자체를 견제하고 지역민을 위해 봉사하라고 뽑아 주었는데 '혈세'만 낭비하고 있는 한심한 작태를 보였으니 유권자들의 시선이 고울 리 없다. 최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는 민주당 출신 당선자를 가리켜 '문돌이'로 부르는 농담이 나왔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 덕분에 당선됐다는 뜻이다. 2004년 17대 총선 당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 반대 열풍을 업고 열린우리당이 압승하면서 당선된 국회의원들을 '탄돌이'라고 불렀던 것을 빗댄 것이다.

지난 2016년 4·13 총선에서는 광주·전남에 '녹색 돌풍'이 불었다. 그 결과 국민의당이 압승했는데 민주당에 대한 그동안의 실망감이 표심으로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다. 그리고 2년 뒤 지방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문 대통령의 인기에 힘입어 압승했다. 그런데도 민주당 지방의원들은 또다시 지역민은 안중에 없이 오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일 경우 앞으로 더 아픈 회초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이들은 모르는 걸까.

/최권일·정치부 부장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2-0195〉	업무국 220-0551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여론매체부 220-0652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경제부 220-0663	예향부 220-0692		
사회부 220-0664	사진부 220-0693		
전남본부 220-0642	체육부 220-0697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